

여순특별법 법안소위 상정... 한전공대법 다음주 재논의

3월 임시국회 개회... 여야, 추경·상생연대 3법 공방 예고 국민의힘 "추경은 재보선용"... 협력이익공유제 등 반대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한전공대 특별법)의 법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2일 시작했다. 국회는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일 제출되면, 5일 국무총리의 시장연설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여순사건 특별법이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될 예정이고, 한 차례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던 한전공대법도 11일과 16일께 재논의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추경안 심사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도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주 간 예정위 심사를 거쳐 오는 18~19일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해 이날 말부터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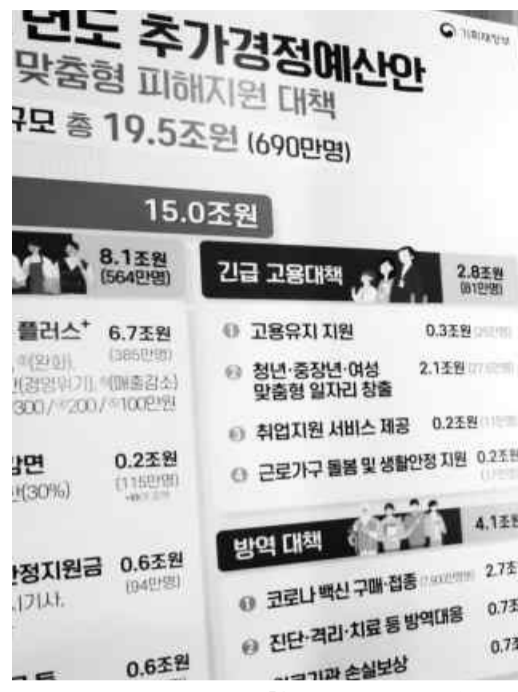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 "3월 국회는 여야합의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없이 상임위와 본회의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집중하는 그야말로 '입법국회'가 되도록 했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민생을 회복하는 한편, 경제혁신 입법과 K-뉴딜 입법을 통해 경제 도약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추경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서, 3월에 재

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추경안에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긴급고용대책을 위한 예산과 코로나 백신 등 방역 예산도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상생연대 3법' (손실보상제법·협력이익공유제법·사회연대기금법)도 3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민주당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손실보상제법 (소상공인보호지원법 개정안) 등을 지난 달 발의하고 이날 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해 유족들을 찾아 입법을 다짐했던 여순사건 특별법이 3월 국회에서 처리될지도 관심이다. 지난 19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여순사건 특별법은 최근 제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처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전공대의 정상 개교를 위한 필수 법안인 한전공대법도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최대 현안 법안이었다던 폐광지역개발지원법 관련 특별법이 최근 처리되면서 소위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여순사건특별법과 한전공대법은 현재 각 소위에서 상위 순번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보선용 타이밍'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추경 재원 상당 부분이 국채라는 점을 들어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당정청은 15조원 규모의 추경과 함께 지정

예산(이미 확정된 예산) 4조5000억원 등 19조 5000억원의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 입법 논의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협력이익공유제나 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선 "기업의 자금 조성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강제나 다름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與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속도 조절

시행 유예기간·인력·보안 수사 등 쟁점... 전문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 발의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속도조절에 나선 분위기다.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그대로라면서도, 3월 초에는 발의하겠다는 애초 계획에 다른 여지를 두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당내와 당정 간 이견 조율 과정이 남았다"며 "발의 시점을 정해놓는 건 아니니 유연성 있게 할 것"이라

고 말했다. 지도부 관계자도 "생각보다 쟁점들에 대한 내부 이견이 많고, 의견수렴 절차가 지연된 면이 있다"며 "발의 시점은 애초 목표보다 조금 늦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특위 내 이견을 좁히고 의총, 전문가 공청회, 당정청 협의 등의 절차를 밟아 법안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특위 내에서는 중수청법 내용 중 시행 유예기간, 인력 규모, 보안 수사 등 쟁점을 두고 의견

이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현 상황이 박근혜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속도조절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어 있다. 외부적 요인보다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다져 충실한 법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속도조절 논란이 '당·정·청 엇박자'라는 해석을 불러일으킨 상황에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휘발성 큰 검찰개혁 이슈를 부각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읽힌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중수청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 역시 어느 정도 예상된 반응이라며 대응을 자제하는 기류다.

다만 윤 총장이 공개 반대의 목소리를 거듭 낼 경우 강경론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여기도 브리핑

김원이 "목포 등 9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은 2일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추경 및 재난지원금 지급 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목표 등 9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재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지원대상과 금액이 모두 확대됐고 지원 기준도 완화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지방의 관광·여행 업체를 비롯해 화훼농가, 친환경농가, 노점상 등 전통시장 미등록 사업자 등은 여전히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지원대상과 금액이 모두 확대됐고 지원 기준도 완화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지방에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액이 전년 대비 48조9000억 원에 달하고 화훼농가, 친환경농가, 노점상 등 전통시장 미등록 사업자 등도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진애 "범여 단일화 위해 의원직 사퇴"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김의겸 전 靑 대변인 의원직 승계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김진애 의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함께 승리하는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범민주여권의 단일화는 정치계에만 하는 범보수야권의 단일화와 달라야 한다. 승리하려면 충실한 단일화 방식이 필요하고, 서울시민이 꼭 투표하러 나오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일화 방식과 절차

에 대한 이견으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의원직 사퇴 카드로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지금의 시대정신은 국회의원 김진애보다 서울시장 김진애를 원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 요청한다. 의원직 사퇴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부디 공정한 단일화 방안으로 합의되는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단일화 여부와 관계없이 사퇴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의사를 진즉 열을 전부터 민주당에 밝혀왔다"고 답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인 김 의원이 사퇴하면 다음 순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의원직 승계한다. /연합뉴스

민주 보성군의원 후보에 조영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2일 "4·7 보궐선거 보성군의원 다선거구 후보자로 조영남(여·59) 예비후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 1, 2일 권리당원 100% 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시행된 보성군의원 다선거구 후보 경선에서 박정욱(65) 예비후보를 누르고 공천 후보자로 결정됐다. 전남도당은 당헌 제102조에 의거, 공표 시점 이후 48시간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보선이 치러지는 전남 3곳 선거구에서 민주당은 금품 살포 의혹 여파로 후보자 재공모에 들어간 순천 1선거구(도의원)를 제외한 2곳의 공천을 확정했다. 앞서 전남도당은 고홍 2선거구 도의원 선거 공천 후보자로 박선준(42) 후보를 단수 공천했다. /김형호 기자 khh@

김승남, 지방항만 운영권 시·도 이양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2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추진하던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이 지난 1월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해수부가 관리하던 통영항 등 17개 지방관리 무역항과 녹동신항 등 18개 지방관리 연안항의 개발 및 운영권이 국가에서 시·도로 권한이 이양됐다. 하지만 현행 항만법이 지난해 전부 개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업무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검토 당시

에 포함하지 않던 사무의 허가권자를 여전히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법리상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었다. 이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의 지방관리 항만시설의 개발과 운영 권한을 원활히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항만시설의 관리·운영 권한을 시·도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일괄이양법이 포함하지 못했던 사무들을 추가해 현행법의 법리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다. /오광록 기자 kroh@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가,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도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아시안 주도로 코너 점포 8간,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4)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간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층,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야마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은행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중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플러스빌딩 2층 2호실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